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열자”

추미애 더민주 대표 연설 “합의의 정치가 양극화·저성장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 될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20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영수회담이 열리면) 합의의 정치가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며 “대통령의 흔쾌한 (영수회담) 수용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가계부채와 관련, “가계부채 문제는 단발성·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며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정부부처의 정책조정과 평가를 위한 가계부채 영향평가제 도입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에 인상에 관해선 “법인세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세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기업에는 “기업의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 달라.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에 관해선 “물류 소크로 한국 해운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그동안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문제가 감지됐는데도 방치하다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부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강경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

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며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사드 1개라도 국인이 분열되고 전국이 혼란을 앓고 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사드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진다”며 “결국 국민의 분열은 더욱 커지고 국민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사드 문제가 우리에게 불편한 또다른 이유는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외교적·경제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

전주시의회, 추석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원은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6일 장애인 재활훈련 시설인 아름다운 세상과 아시아이주여성센터, 미혼모시설인 기쁨누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생필품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로부터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김 의원은 “경이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어렵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따뜻한 마음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훈훈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오는 9일까지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회복지시설을 연이어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조운선 바꾼 야3당, 가제는 게 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 김 장관에 대해서만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조 장관 바꾸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두 장관 해임건의가 주된 관심사였다. 당초 야3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된 두 장관을 상대로 모두 해임건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회동에서 기류가 갑자기 바뀌었다.

장관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간 해당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해임을 건의해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김 장관의 경우 경북대 동문회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청문회 과정서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언론 등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패싹에 걸렸지만 조 장관은 아직 이렇다 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원회관 로비에 쌓여 있는 추석 택배상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각 의원실로 배달될 추석 선물 택배상자가 쌓여 있다. 이 달 김영리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예년보다 택배량이 줄어든 모습이다.

도선관위, 추석명절 위법행위 안내·예방 강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해 위법행위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시·군선관위에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수한 사람에게는 사인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선거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광영 기자

김 장관의 경우 경북대 동문회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청문회 과정서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언론 등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패싹에 걸렸지만 조 장관은 아직 이렇다 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을 상대로도 해임건의를 하면 자칫 집무도 시작하지 않은 장관을 자르려 한다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회동 중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야3당 원내대표들은 임명된 후 논란이 되는 글을 올려 문제를 일으킨 김 장관만 상대로만 해임을 건의하는 ‘선박과 집중’ 전술을 택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연간 5억원에 가까운 생활비 지출 논란을 일으킨 조 장관도 김 장관을 상대로만 해임을 건의하는 ‘선박과 집중’ 전술을 택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전북 자동차산업 육성 위해 더욱 노력”

도의회 산업경제위,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방문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6일 상용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연구 기반 구축사업 현장인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을 방문했다.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지도·보급 및 훈련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조도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연구동과 부품 신뢰성평가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보유장비 116종 135대가 가동 중이다.

기술원은 1실 5분부로 운영되고 있고 62명의 자동차 전문 인력이 연간 약 303억원

의 예산을 투자해 도내 자동차관련 기업이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학수 위원장은 “기술원이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 만큼 지역을 넘어 글로벌기관으로 성장시켜 전북도의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현철 의원은 미래그린 상용차 R&D센터와 주행시험장을 둘러보고 “상용차 주행시험장에 군산시비 30억원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용호 의원은 “지난 7월 광주광역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300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우리 기술원에서도 도내 산학연관 협업을 통해 상용차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사업으로 광주광역시의 예타사업 규모에 버금가는 대형 국가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진세 의원은 “자동차와 탄소 소재의 융복합 분야를 강화하여 전라북도 핵심산업인 탄소산업 육성을 물론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유성엽 의원 ‘정세균 의장 세월호 특검요청안 직권상정’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6일 ‘세월호 특검 도입’ 논의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은 이 문제를 직권상정해서 특조위에서 못한 조사와 수사를 특검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비상한 결단을 내려 달라”고 공개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본회의에서 의결해 특검이 이뤄지게 하는 게 국회의 최소한의 도리다. 지도부에도 특검 문제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로 지난 6월로 간주하고 있는 정부 태도를 언급하며 “정부는 그런 정부라고 쳐도 국회가 무가력하게 대응한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뉴스

‘학교에서 노동인권 가르치자’

이춘석 의원,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초년생 등 노동 약자들이 실제 직장 등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6일 모든 국민이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1원칙을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으로 보고, 국민 누구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직장에서 필요한 노동인권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장치는 두고 있지 않다.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 재량으로 산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프랑스와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초·중·고교 과정에서부터 교과(목)의 교육내용 중에 근로계약서, 임금, 안전, 근로조건, 불법노동, 모의 노사관계, 노사관계 관련 법률 등 노동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년간 아르바이트 등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소위 열정페이 등 청년층 저임금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모든 정당한 권리 행사의 첫걸음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일반 성인은 물론 청소년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권리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으로 실제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것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ICA 서울총회 기록전 현장활동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6일 전주 풍남학사 사무소와 ICA 서울총회 기록전 현장활동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전주시 장학숙 풍남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과 전반적인 운영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위원회는 6일부터 9일까지 국가기록원, 세계기록물관리협회(ICA)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기록인의 올림피아, 2016 ICA 서울총회 기록전을 찾았다.

전주시 전시 시찰을 찾은 의원들은 조선왕조실록 복본 600여 점(어진박물관), 복본한지(훈포장지, 문화재 복원용 한지 등), 한지 뜨기 체험용품 등 전시품을 관람하고 “이번 기록전에서 조선왕조실록과 한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래된 행정위원장은 “지역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한지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전통한지산업을 활성화하고 기록문화전통을 계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야당 ‘김앤장 무혐의 처분 검찰, 국민요구 역행’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야당의원들은 6일 옥시데퀴텐 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거연쇄에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에 대해, “이런 검찰의 행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급태섭·신창현·이훈·정춘숙(더불어민주당), 송기석·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1월 서울대 조모 교수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확인했다는 내용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참석했다는 사실과 유해성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김앤장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해 4년 전에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최종 결과보고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위조된 보고서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준 것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정조사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그것도 주말에 기습적으로 이와 같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국회를 무시한 행위이자 국민들을 기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뉴스